



金井議政

제2015-11호

2015년 11월 2일(월)

의회사무국 ☎ 519-5501~5
http://council.geumjeong.go.kr/

열린의정 소통의정

금정구 의회 제238회 임시회

- 기 간 : 2015. 10. 6.(화) ~ 10. 16.(금) ▶11일간
- 장 소 : 의회 3층 본회의장 등
- 참 석 : 의원 전원
- 의안 의결결과

의안명	제출일자	의결일자	의결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9.22	15.10.16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9.22	15.10.16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9.22	15.10.16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9.22	15.10.16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9.22	15.10.16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9.22	15.10.16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15.9.22	15.10.16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5.9.22	15.10.16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5.9.22	15.10.16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9.22	15.10.16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5.9.22	15.10.16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5.9.22	15.10.16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9.23	15.10.16	수정가결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5.10.15	15.10.16	원안채택



의정 일지

일시	내용	비고
10/1(목) 17:30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의장
10/2(금) 14:20	·제4회 금정구평생학습박람회 개회식	의원
10/6(화) 10:00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의원
10/6(화) 11:00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원
10/6(화) 11:30	·10월 의원 정례 간담회	의원
10/7(수) 10:0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의원
10/7(수) 10:00	·구 군의장협의회 10월 월례회	의장
10/8(목) 09:00	·군위군 군민체육대회 및 자랑스러운 군민 상 수상	의장
10/8(목) 10:0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원
10/12(월) 10:00	·제238회 임시회 조례안 검토(자체)	의원
10/13(화) 10:00	·제238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의원
10/14(수) 10:00	·제238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의원
10/15(목) 10:0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의원
10/16(금) 11:00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10/16(금) 14:00	·2015년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	의원
10/26~10/28	·2015년 의원 타시도 방문	의원
10/30(금) 10:00	·금정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문화예술 관계자 워크숍	의원
10/30(금) 13:30	·2015 구인·구인 한마당	의원
10/30(금) 18:00	·2015 금샘예술축제 개막식	의원

주요 의정 활동

■ ‘2015.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 실시

▷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금정구 여성친화도시 지정(2014년 12월 1일)에 따라 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6일 ‘2015.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가졌다.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김선희 교수의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라는 제목의 강의를 듣고 의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금정구 여성친화도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 시간을 가졌다.



■ 의원 발의 조례 사항

①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발의자 : 오희주의원

(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외 2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정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입법평가를 하여, 조례를 입법만 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하지 않아 입법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평가결과 반영 및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발의자 : 정미영의원

(부곡2·3동, 청룡노·포동, 선두구동-새정치민주연합)외 1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정구민의 재능기부를 보다 활성화하고 장려함으로써 공적 부조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고 소수의 주민들이라도 소외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며 각자가 가진 재능을 나눔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능기부의 기본이념과 정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발의자 : 김성수의원

(서2·3동, 금사동-새누리당)외 5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보훈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지원하여 보훈회관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회관 기능, 보훈회관 입주단체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위탁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위탁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발의자 : 김호숙의원

(장전·2·3동, 구서동, 금성동-새누리당)외 5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도모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생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수행 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정종민의원

(서1동, 부곡1·4동-새정치민주연합)외 5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소음과 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소음과 먼지에 대한 적정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사장 등 배출소음 및 생활소음 측정에 관한 사항,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에 관한 사항, 특정장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소음저감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⑥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발의자 : 박인영의원

(남산동, 구사2동-새정치민주연합)외 5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이고, 이미 노후화된 도로부속물의 보수정비 및 미비한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으나 구의 일반회계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코자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한다.

5분 자유발언

◆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0. 16.)



정미영 의원

(부곡2·3동, 청룡노포동, 선두구동-새정치민주연합)

제목: 영락공원 진입로 주변 이대로 좋은가?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정미영입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더웠던 여름 자리를 물려받은 2015년 가을도 절정으로 치달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저의 선거구인 청룡노포동 영락공원 진입로 주변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9월25일 에서 29일까지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도 1만8253대의 차량과 18만5330명의 성묘객이 영락공원을 다녀가셨답니다.

성묘 때 조화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인지 영락공원으로 진입하는 금정도서관로에는 조화 가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이들 가게는 공부상에는 없습니다. 추정컨대 이들 가게는 청룡동 8-2번지와 9-2번지 등의 금정 도서관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정구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한 조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가게는 이처럼 평소에도 도로의 인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추석 등 성묘객들이 많은 때에는 차도에까지 내려와 호객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금정구는 몇몇 사인들이 오랫동안 불법으로 점유해온 공도를 우리 25만 금정구민 나아가 350만 부산시민 모두에게 하루빨리 되돌려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은 도시철도 범어사역에서 출발하여 영락공원을 거쳐 두구동을 오가는 2-1번 마을버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노선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로한 분들의 이용이 많은데 정류장에는 비를 가릴 공간은 커녕 제대로 된 의자도 없습니다. 승객에 대한 배려가 아쉽습니다.

이 마을버스 운영에는 불법 유턴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구동에서 범어사역으로 오는 마을버스는 범어사역 4번 출구 앞에서 승객을 내리고 두구동 쪽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4번과 2번 출구 사이의 금정도서관로를 입구에서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따라 불법으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와 제27조 등의 위반이며, 이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위반입니다. 4번 출구 앞에서 승객들을 내린 다음, 우회전해 범어사역구 삼거리까지 올라가 유턴해 침례병원 앞에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다시 유턴하여 2번 출구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합법적인 루트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의 안전을 양보하면서 불법적인 유턴 관행을 앞으로 묵인할 것인지? 이 관행에도 일리가 없지 않아 이를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버스에 다소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합법적인 루트를 지도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인지, 우리 금정구는 금정경찰서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팔송파출소 입구에 있는 시민의 쉼터에 관한 것입니다. 2002년에 주민들이 심시일반으로 만든 쉼터에는 지금 나무 의자 2개와 휴지통 2개가 놓여 있습니다. 휴일이나 주말이면 금정산과 범어사, 그리고 영락공원을 찾는 분들이 들르는 쉼터이자 만남의 장소라고 부르기에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2002년에는 주민들의 손을 빌렸으니 이번에는 금정구에서 이를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해볼 수는 없을까요?

이때 쉼터 뒤에 위치한 화장실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시민의 쉼터가 있다 보니, 팔송파출소의 화장실을 빌리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지었다는 현재의 화장실에는 장애인이나 남녀의 구별이 없을 뿐더러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지 화장지도 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형편이 아닌지, 쉼터에 화장실의 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이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부산광역시나 금정구가 쉼터를 찾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편의시설;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0. 16.)



박종성 의원

(장전1·2·3동, 구서1동, 금성동-새정치민주연합)

제목: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에 대해

사랑하는 금정구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역사학을 전공한 금정구 의회 의원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쟁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다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학문의 고유 영역에 대한 야만적 권력침탈이며, 정권을 잡았다고 국민의 역사관까지 조율하려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역사는 권력에 의해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와 보편성에 입각한 연구의 성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류사회의 인문학적 진보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사실에 대한 해석의 학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대입할 수 있는 주관성은 보장받을 수 있으나, 그 개인의 주관성이 사회의 보편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검증과 합리적 타당성, 그리고 논쟁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한국근현대사분야는 1980년대부터 비약적인 성과를 내었던 분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새로운 국비사료들이 공개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낸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이란 권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든, 비겁한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그것 자체로 후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솔직담백하게 기록해야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독일이 세계적인 정치 경제 강국이지만 히틀러 시대를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통절하게 후회함으로써, 오늘날 유럽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항쟁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해방전선의 전면에 나섰던 분들에게 사회주의냐, 민족주의냐 하는 사상의 문제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불세출의 항쟁을 하였던 우리 조상들의 독립전쟁사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비정상적 기저에는 민족반역자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해방 시기에 수많은 민족지도자들이 암살을 당하고, 반민특위가 강제로 경찰에 의해 해체되고, 이승만 정권과 미 군정에 의해 민족반역자 집단들이 제도권에 재등용되면서 이데올로기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정통성을 감추고자, 타공, 반공,

좌경, 중복의 단어들을 만들어 내면서 오늘날 독버섯 같이 이 사회의 주류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이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통렬히 반성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대우를 해주고, 일제와 결탁하여 호가호위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민족반역자들에게 준엄하게 죄를 묻는 것. 그 선례야말로 훗날 국가적 변고 사태 때 우리 모두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법적 정통성은 임시 정부에게 있으며, 5.16은 권력찬탈을 위한 쿠데타이며, 박정희는 친일파이자 남로당의 주요 군사 책임자였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를 통해 아무리 미화한다고 해도,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일 뿐, 준엄한 역사의 평가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정구 주민여러분

역사는 권력에 의해 재단되어서도, 재단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역사에 대한 개입은 항상 비극으로 그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의 이번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는 새로운 전체주의의 시작이자 신유신의 시작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 끔찍했던 유신의 악몽을 물려주기는 싫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물려줄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모두는 정말 살기 어려웠습니다. 세월호 사태때 수많은 우리의 보물과 같은 자식들을 수장했으면서도 진상규명도 진심어린 위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메르스사태때 허둥대는 정부를 보면서 우리 목숨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허탈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계부채는 하늘을 찌를 언제 우리의 목을 죄는 시한폭탄으로 날아올지 모릅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사회적 비리와 중앙 공직자들의 무책임과 부패는 그 끝을 모를 정도로 만연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율할 사회적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고, 약자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괴물 같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역사교과서 논쟁을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국민들을 양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목도하고 기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반문명적인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2015년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0. 16.)



조준영 의원

(서2·3동, 금사동-새정치민주연합)

제목: 안전한 어린이집, 안전도시 금정의 시작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준영의원입니다.

올 여름, 서울 서초구의 한 민간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1979년 준공, 37년 된 벽돌 건물입니다.

작년 봄에는 부산 서구에서 준공 21년 된 어린이집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다 안전점검을 받은 곳인데,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점검의 실효성 부족, 체계적 현황자료 부재로 영세한 노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금정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ISDR 국제안전도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유니세프와 결연을 맺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는 것을 구정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정구의 예산, 행정력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아낌없이 쓰겠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현재 금정구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4,400명 그 중 정부 및 부산시 예산, 기업체 자금으로 노후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가능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1,081명 전체 재원생의 25%입니다. 나머지 75%의 아동이 다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안전이 걱정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안전점검 방식과 내용에서 우려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점검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준공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얼마나 될까요? 건축물 대장 상, 20년이상~30년 미만 어린이집은 35%, 30년 이상~40년 미만 어린이집은 16%, 40년 이상 어린이집은 1%입니다. 총 64개소, 52%로 금정구 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현행 일별, 월별 자체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모아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점검이 아니라 잡무다” ,

“건물이 낡아서 늘 걱정스럽지만, 이걸 다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하십니다.

보건복지부 안전점검표도 건물의 안전점검 항목은 단 3개인데, 이것마저 구조적 안전을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부실합니다.

일단 금정구청은 도시안전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등이 주무부서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20년 이상 된 조적조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둘째, 노후 건물에 대한 체계적 현황자료 부재가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전체 어린이집의 88%에 이르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낡은 건물에 대한 아무런 분석 자료가 없어서, 평소 위험에 대한 인지도나 대응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20년 이상/벽돌 및 블록으로 지은 조적조 건물은 19개소에 63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며 어린이 집 차량을 태워 보내는데, 재원 아동 15%가 도대체 어떤 결함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노후 건물에서 매일 12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안한 합동점검팀이 어린이집 안전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체계적인 현황자료를 만들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경우, ‘특정정밀안전진단’을 고려하고, 필요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수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구청, 의회가 머리를 맞댑시다.

셋째,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너무나 영세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 안전은 1차적으로 시설장의 책임이지만 영세한 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안전을 시설장의 능력과 의지에만 기대는 건 너무 불안합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험에 방치할 수 없으니 우리 구에서도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초구의 경우, 『영유아보육법』(비용보조) 조항과 『사회복지사업법』(시설의 안전점검) 조항을 근거로 구비로 안전점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도시안전과에서 “재난취약 시설 안전점검 평가단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례 2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사항’에 한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위험성이 높은 노후 어린이집 안전진단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바랍니다.

이밖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안전점검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타구의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등 노후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서 행정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제정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문화예술특구, 국제안전도시, 아동친화 도시, 유니세프 협력도시, 금정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안전의 확보가 그 출발이 되어 합니다. 스쿨존, 통학로 보행 환경 개선 등에 금정구는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과도하다 할 정도로 투자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금정구의 소중한 자원이자 미래 납세자인 4,000명의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서부터 안전도시 금정구를 시작합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방법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해당부서 담당자께서 보여주신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진심에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